

2016년, 출산율2.1시대를 향한 낫선 경제학

-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6. 5. 24 (화) 15:30~17:3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룸

<사회>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방문규 차관 (보건복지부)

김태헌 명예교수 (교원대)

김상호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제2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1. 일 시 : 5월 24(화) 오후 3시 - 5시 (120분)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참석 인원 10명 정도의 소형 세미나 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연간 주제 : **출산율 2.1 시대를 향한 낫선 경제학**
 5월 주제 :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 발표·토론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발표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저출산 대책(‘브릿지플랜’)의 주요 내용 .제3차 저출산 대책 (2016~2020년)의 주요 내용 .정책수단(예산 등)은 충분한지? .3차 대책을 계기로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방문규 차관 (보건복지부)
패널1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저출산 대책이 과거와 다른 점 .제1차 및 제2차 대책과 다른 내용 .제3차 대책의 중점 추진 과제 .제3차 대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김태현 명예교수 (교원대학교, 저출산보육사회위원회 결혼출산 분과위원장)
패널2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사례(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와 시사점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의 사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과 우리의 과제 	김상호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별첨 1> '출산율 2.1 시대를 향한 낯선 경제학' 연간 세미나 일정 (안)

	월별 세미나 주제	참석자 (안)
4월 (21일)	(도입) 저출산대책 10년 평가: 성과와 과제 - 과거 대책 중 성과는 무엇? 미흡한 분야는? - 2005년 1.08에서 2015년 1.24로 소폭 증가 - 저출산의 부작용 : 인구구조, 저성장 등	- 조흥식 교수(서울대) - 진수희 전 장관 - 김용익 국회의원(더민주당)
5월 (24일)	(총론)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 - 2016-2020년까지 '브릿지플랜' 주요 내용 - 정책 수단(예산 등)은 충분한가? - 향후 저출산 해소 가능한가?	- 복지부 차관 -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3차 대책 참여했던 교수
6월	(주택) 주거비 부담, 어떻게 낮추나?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모기지(장기저리대출) 활성화 방안	- 국토부 차관 - 건설연/국토연/주택연구원장 - 주택소비자(신혼부부 대표)
7월	(교육) 교육제도 개혁, 교육비 부담 완화는? - 직업교육/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교육비 부담 낮출 수 있는 방안	- 교육부 차관 - 교육개발원 원장 -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폴리텍대학 총장 - 산업기술대학 총장
9월	(일자리) 청년들은 취업을 안하나? 못하나? - 대기업 일자리 부족,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 중소기업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바꾸기 - 중소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우기	- 중소기업 청장 - 중소기업 연구원장 - 노동연구원장
10월	(결혼/육아) 결혼은 선택? 육아 부담은 필수? - 미혼, 만혼, 비혼 실태 - 가사 부담, 일-가정 양립 실태	- 여성가족부 차관 - 여성정책연구원장 - 여성친화기업 C대
11월	(이민) 우수한 외국 인력의 활용 방안 - 이민으로 해결한 사례들(미국 프랑스 등) - 이민 없이 버티는 나라들(일본 등) - 우수인력 선별적 이민은 가능한가?	- 고용노동부 차관 - 산업단지 관련 기관장 - 외국인력 활용기업 대표
12월	(종합) 출산율 2.1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 롯데호텔 신관 14층 중형 세미나룸	- 복지부 1차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주요내용
방문규 차관(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16.5.24.

설명 순서

1. 지난 10년간 평가 및 패러다임 전환 방향 1
2. 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 5
3. 기대효과 및 중장기 전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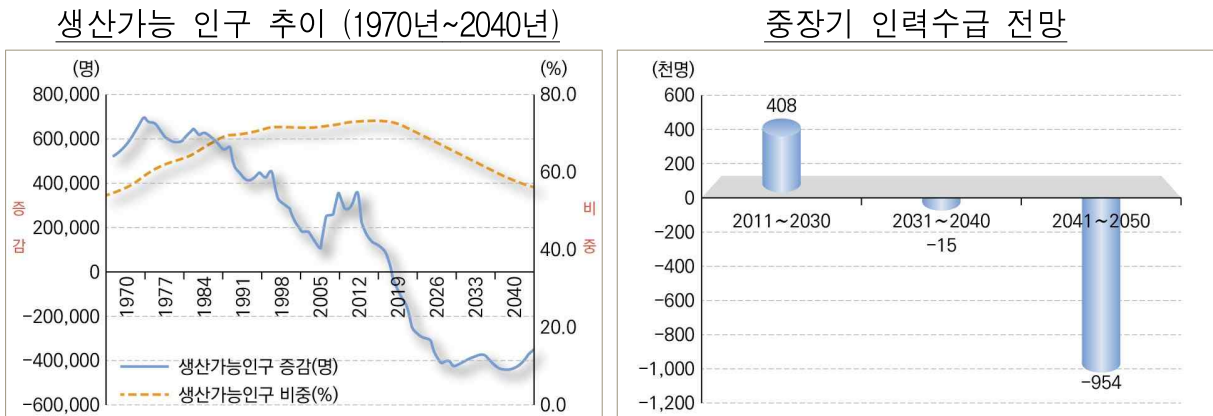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1 | 지난 10년간(2006-2015) 평가 및 패러다임 전환 방향

1]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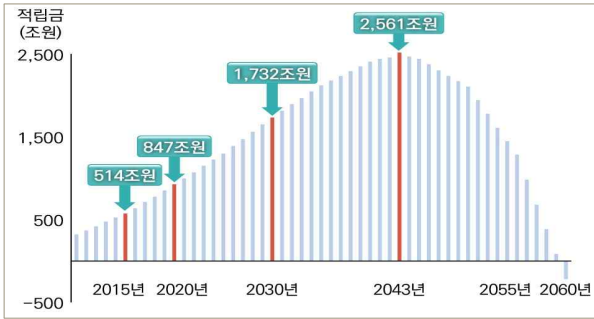
○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

- (노동력)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30년부터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전망
- 신규진입 노동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평균연령이 '15년 40.3세에서 '30년 42.9세로 증가 전망
- 숙련 노동자 노동시장 대거 은퇴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저하 우려
- *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화 : ('01~'10) 4.4% → ('11~'2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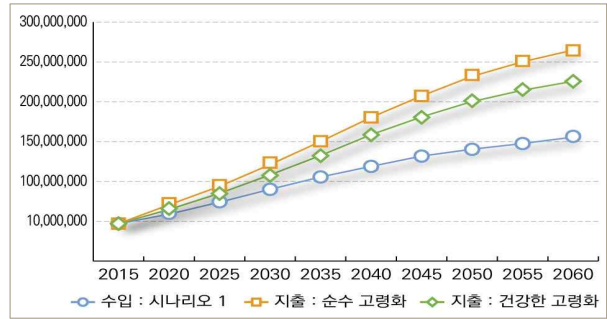


- (경제성장)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투자증가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위축
- * 소비증가율 : ('01~'10) 3.77% → ('11~'30) 3.01% → ('31~'60) 1.41%
- * 투자증가율 : ('01~'10) 3.14% → ('11~'30) 2.44% → ('31~'60) 1.15%
- 경제성장률은 '01~'10년 4.42% → '51~'60년 1.03% 하락 전망
- (재정부담) 연금·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나 수급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출부담 급증
- * 국민연금은 '44년도부터 수지적자 발생, '60년 적립기금 소진
- * 건강보험은 현 보험료율과 지출행태 유지시 '35년에 고갈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추이



건강보험재정수지 전망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년 35.9% 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 상승 우려

* '60년 국가채무비율 64.2%(2060년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 기준)

- (교육) 학령인구는 30년 뒤 현재의 절반까지 감소, 대학 미충원을 증가로 대학간 격차 심화, 대학 인프라 과잉 등 우려

* '16년도부터는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자 수가 적은 상황

- (병역자원) 저출산 장기 지속으로 인해 현행 21개월 복무기간 기준, 병역자원 부족은 '22년부터 시작될 전망

* 병역자원 부족 규모 : ('22) 5.1천명 → ('50) 20천명, 18개월 복무기간 전환시 병역자원 부족은 '20년부터 시작, 부족 규모는 ('20) 16천명 → ('50) 57천명

○ 저출산의 원인은 복잡다단,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해법 필요



② 그간 저출산 대응 평가

-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보육 등 양육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녀 양육부담을 국가·사회와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
 - '05년 합계출산율 1.08 쇼크를 극복하고 합계출산율을 반등시켰으나, 만혼 추세 심화, 취업모 출산 기피 등의 문제로 정책 효과 반감



- 만혼 추세 심화는 저출산의 핵심적 원인이나, 그간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

* 여성 결혼연령에 따른 평균 자녀수 : 25세 미만 2.03명 vs 35세 이상 0.84명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 (실제 1.21)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 특히, 고용·주거·교육 등은 결혼·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나, 1~2차 기본계획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
 - * 취업 남성 미혼 비율: 정규직 23.6% vs. 비정규직 34.3% (노동사회연, '14)
 - * 전세가격 천만원 상승시 결혼률 1.3% 감소 (국토연, '12)
 - * 한자녀 기혼여성 추가출산중단 사유 : 1위 '자녀 교육비 부담' 41.3% (보사연, '12)
-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남성육아참여 미흡 등으로 실천에 한계
 - * 연간 근로시간 : 우리나라 2,057시간 vs OECD 평균 1,800시간
 - * 맞벌이 가구 일일 가사 노동시간 : 남 0.7시간 vs 여 3.3시간 (여성정책연구원, '14)

③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방향

-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시도
 -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고용·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 일·가정 양립은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문화 중심으로 접근



- 저출산은 사회의 인식·문화 전반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 시도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93) 1.66명 → ('14) 2.08명, 스웨덴 ('99) 1.50명 → ('14) 1.88명

참고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목표 체계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 → ('20) 1.5명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14) 49.6 → ('20) 39%



2 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주요 정책과제】

1 청년고용 대책 강화

- (노동 개혁)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창출력 제고, '20년까지 약37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에 따른 고용효과(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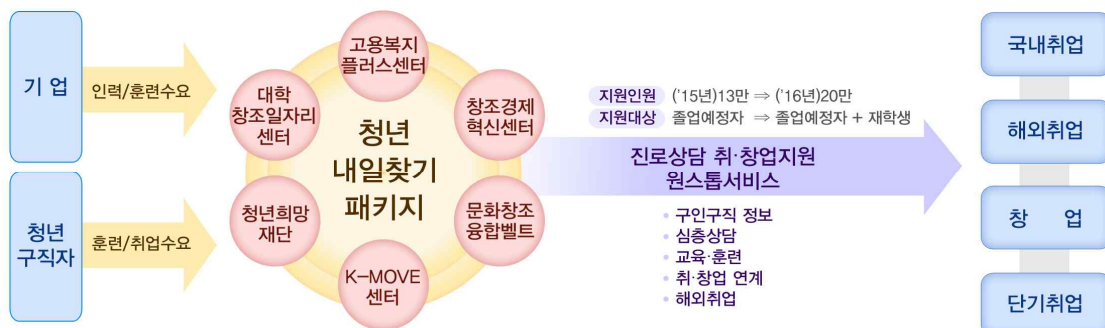
▲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동결 또는 1% 임금인상 시 8.5~11.3만명 ▲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향후 5년간 최대 14~15만명 ▲ (임금피크제 도입)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시 8.7~13.2만명('16~'19)

- (민간 고용) 청년선호 중견기업 청년인턴 확대(1.5만명→'16년 3만명), 청년정규직 채용 증가시 세제·재정 지원* 등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 (청년고용증대세제)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장년 근로자와의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대기업 인턴→협력사 취·창업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17년까지 2만명 지원

- (청년고용 인프라)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



②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5만호* 공급**
 - * 행복주택 투룸형 5.3만호, 전세임대 2만호, 5·10년 임대 2.3만호, 국민임대 3.9만호
- (행복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3만호 공급
-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하남미사 등 10개 지구)
 -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 공간, 등하교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시설 등
- (공공임대주택) 국민 임대, 5년·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7.7만호('10~'14)에서 8.2만호('16~'20)로 확대
 - * 5년·10년 임대 신혼부부 할당 : 10% → 15%
 - * 전세임대 : 평균 공급량(3천호)보다 확대된 4천호 공급, 향후 5년간 총 2만호 공급
- **신혼부부 전세·구매 자금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0.2%p 인하,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 우대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
 - 디딤돌 대출(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금리 0.2%p 추가 우대

③ 출생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 (난임 극복) 난임시술(검사·마취·약제)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3일 무급) 도입, 의학·심리적 상담시설 설치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17)
 - * 15~44세 기혼여성 7명중 1명이 난임, 약 52만명 추정 / 평균시술비용 : 인공 180만원(150만원 지원), 체외 1,200만원(750만원 지원)
 - * 난임시술 지원은 '14년 기준 합계출산율 0.03명 제고 효과

- (행복출산패키지) 초음파·1인실·무통주사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16), 건강보험진료 본인부담 해소* 등 임신·출산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 20~30% → '17년 이후 5%, 국민행복카드로 실질적 해소

행복출산패키지 도입을 통한 임신·출산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예시

▶ 자연분만 산모 : ('15) 117만원 → ('17) 0원(건강보험진료 본인부담 5% + 국민행복카드)

- (포용적 가족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강화* 등 차별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거·양육·학업 병행 전용시설 설치, 양육비 현실화 : ('15) 월15만원 → ('17) 월20만원 → ('19) 월25만원

4]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 (맞춤형 안심 보육) 종일반(07:30~19:30) 단일운영 체제를 취업 형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편('16.7),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여력 확보*

* 종일반 보육료 '15년 대비 6%인상, 보조교사 12,344명 / 대체교사 1,036명 지원

- 부모들이 신뢰하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

* 이용 아동비율 : ('15) 28%→ ('20) 37%→ ('25) 45%

- (초등돌봄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충(24만명→'20년 26만명), 지역아동센터 연계 및 프로그램 질 제고로 부모가 원하는 돌봄 수요 대응 강화

- (교육개혁) 자유학기제-일·학습병행-NCS 채용으로 이어지는 적성·능력 중심 교육-고용 연계 강화를 통해 사교육 유발의 근본적 문제 개선

-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수능영어 절대평가('17) 등 사교육 부담 경감

*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확산 : (고교) 전 공업계 특성화고(~'17), (전문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사업 (16개 사업단), (4년제)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확산('16. 20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벌·스펙중심 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 표준

5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중소기업·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충(1천명→'20년 6천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100개소 신설) 등 공공·대기업과의 격차 완화
 -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20만→'17년 30만원) 추진
- (남성) 아빠의 달* 확대('16, 1→3개월), 공공·대기업 실천협약 체결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전체 육아휴직자 중 비중 5% → '20년 15%)
 -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로 사용자의 첫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액 100→150만원)까지 상향 지급
- (직장 복귀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16), 육아기 단축근로*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제) 활성화** 등 경력단절 방지
 -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 공공·대기업 전수조사(총430만명) 실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방안 마련
- (관행개선) 가족친화기업 확대(956개→'20년 2,500개), 건강보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정보 연계로 부당해고 및 제도 미사용 관리 강화('16)
 - * 출산근로자의 출산예정일 경과 후에도 출산휴가급여 미신청, 출산예정일 전후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근로감독관에게 자동 통지, 조사 실시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

1 민간·지역 협력 및 참여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구성·운영('16.4), 전사회적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지역단위에서도 사회연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확산
 - * 경제단체, 종단, 노동계, 시민단체 등 5,800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09~'13) 경험을 참고, 민간 주도성이 강화된 전사회적 운동 재추진

- (경제계)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맞벌이 가구 시간지원**을 위한 **경제단체별 3대 핵심과제**** 확산('16.3~)
 - * 고용부·복지부·여가부, 경제5단체 등 참여, 일·가정 양립 모니터링, 우수 사례 확산, 민관합동 캠페인 등 추진
 - ** (경총)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경련) 남성육아휴직, (중기중앙회) 대체인력지원
- (종교계) 종단별 **결혼·출산친화 교육 확대**, '생명존중',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종교문화축제**」 개최('16.9)

참고 : 종단별 결혼·출산친화 교육 주요 내용

- ▶ (기독교) 교계 지도자 인구교육, 결혼장려 청년·대학생 세미나, 출산장려 행복캠프
- ▶ (천주교) 라디오 정규프로그램 “생명은 사랑입니다” 편성, 가톨릭대 교양과목 편성
- ▶ (불교) 만남템플스테이, 가족상담 및 출산장려 교육, 다둥이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 (시민단체) 「**저출산 극복 시민운동 협의체**」 구성·운영(3월~), **공동 캠페인, 릴레이 기고 등 기획·추진**
 - * (예) 7월: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9월: 포용적 가족관 형성, 10~12월: 고비용 양육 문화 개선, 임신부·난임가족 배려, 작은결혼식
- (지자체) 시도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3월~), **네트워크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추진 지원**
 - *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출산장려 문화공연, 미혼남녀 만남, 아빠참여 프로그램 등

② 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 대폭 강화

- * 미혼자의 결혼의향 감소 : ('14) 76.0% → ('15) 68.4% ('15. 국민인식조사)
- **아동·청소년 : 학교교육을 활용*한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
 - * 검·인정교과서 내용 반영, 학교인구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산 등
- **2030 미혼남녀 :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관* 제시, 2030세대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감성 홍보**
 - * '둘 사이의 사랑'이 중심이 된 거품 없는 결혼, 양성이 평등한 동반자象 등

- 기혼가구(맞벌이) : '둘째 이상 다자녀'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집중 홍보, 남성 가사·육아분담문화 확산

* 형제, 자매가 있음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 쓸쓸하지 않은 노년 등

③ 정책 모니터링·평가 강화로 범정부적 대응 노력 확보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 과제 대상 현장 중심 점검·평가시스템* 구축,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주기 단축(연1회→연4회)

* 기본계획 점검·평가단(단장: 보사연 원장) 설치, 현장 점검 →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 개선방안 마련 → 장관급 회의체 상정 → 보완대책 시행 → 모니터링·평가 실시

- 법령·제도 신설·변경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 출산 친화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실시(보사연)

④ 재정 투자

- 제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 규모는 향후 5년간 총198조원으로
이 중 저출산 대책에 약 109조원이 투자될 전망

* 1~2차 기본계획('06~'15) : 151.3조원, 저출산 분야 79.7조원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

3차 기본계획('16~'20) 연차별 재정 계획

(단위: 억원)

	'15	'16~'20소요예산액					계
		'16	'17	'18	'19	'20	
계	325,716*	352,517	373,662	384,804	425,722	445,479	1,982,184
저출산 분야	192,932	214,173	217,224	218,438	220,011	223,837	1,093,683
고령사회 분야	132,784	138,344	156,438	166,365	205,710	221,642	888,499

* '15년 예산 규모는 3차 기본계획('16~'20) 사업기준으로 산정

※ '16년 주요 예산 사업 : 보육 10.8조원, 기초연금 10.3조원, 반값 등록금 3.9조원, 청년고용 1.3조원, 주거 2.4조원 등

3

기대 효과 및 중장기 전망

① 기대효과 : 결혼하기 좋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초저출산 탈피



제3차 저출산 대책이 과거와 다른 점

김태헌 명예교수(교원대)

1. 제1차 및 제2차 대책과 다른 내용

가. '새로마지플랜'에서 '브릿지플랜'으로

-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새로마지플랜'으로 명명
 - '새로'는 새롭게 태어난 출생을 의미하며, '마지'는 사망할 때까지 라는 의미.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의지.
-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새로마지플랜'의 명칭을 유지.
-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브릿지플랜'이라는 명칭을 사용.
 - 브릿지플랜(Bridge Plan)이라는 명칭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인구보너스(bonus) 기간에서 인구오너스(onus)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잇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임. 제3차 기본계획 기간(2016~2020) 중에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2018년부터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이행할 전망.
 - BIRDGE는 Building new culture(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핵심), Restructuring(만혼추세 완화 핵심의 제화,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접근으로 개선), Implementation('있는 제도'가 '실천'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 Daddy(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로 일하는 엄마의 출산율 제고), Going together(민간, 지역,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Enlargement(사회구조적 문제, 인구경쟁력, 산업·경제 등으로 대책 범위 확장) 등 단어들의 첫 알파벳의 합성어.

나. 주요 차이

1) 목표의 구체화: 2020년 목표 합계출산율을 1.5로 제시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목표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으로 막연한 목표를 제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현상의 인구학적 원인을 계량화하고, 정책들을 통해 인구학적 원인들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까지 1.5명 그리고 2045년까지 인구의 대체출산수준(2.1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 그러므로 제3차 저출산대책의 성과는 목표 출산율달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2) 과거 출산과 양육 중심대책에 결혼을 주요 요인으로 포함

-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수가 많으나 적으나에 따라 결정되는 양적효과(Quantum Effects)와 출산시기가 빠르고 늦은데서 영향을 받는 시간효과(Tempo Effects)임. 그러므로 제3차 저출산대책에서는 과거 출산과 양육에 초점을 맞췄으나 출산시기를 결정하는 결혼을 주요대상에 포함하여 조기 결혼을 장려하고, 하루라도 더 일찍 출산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3) 가족친화가치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주요과제로 채택

-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자신이 결혼하고, 부모됨이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으로 가능하지만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임. 결혼과 출산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환경조성과 함께 새로운 문화의 조성과 개인의 인식과 가치변화를 중요시하고 있음.

2.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중점 추진 과제

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이 설정되었음(<표 1> 참조).

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전략

- 결혼 기반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전략

- 난임을 예방하고, 치료하면 바로 임신, 출산으로 이어짐. 난임과 함께 개인부담이 큰 고위험 임신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포기되는 출생·양육의 문제가 없도록 포용적 가족관을 확산.

3)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전략

- 국공립 보육원, 직장 어린이집 등의 확충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 공교육의 개혁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으로 자녀 출산의 가장 큰 기회비용인 사교육 부담을 해소.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전략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와 장시간 근로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을 보편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일·가정양립 소외문제를 해결.

나. 결혼·출산 문화 변화와 친 결혼과 친 가족 가치와 태도 형성

1)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 (종교계)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결혼·출산 등 가족친화교육 활성화
- (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및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
- (시민사회) 양성평등 육아문화,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 (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저출산 인식개선 운동 구심적 역할 및 지역특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시행
- (중앙정부) 민간과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활동을 지원

2)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 위원회 내에 민·관 합동 홍보협의체 구성,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인식·문화 개선 3대 핵심 메시지 즉, 남성의 육아참여(‘육아하는 아빠가 멋있다’)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가족형태는 달라도 아이사랑’) 등 집중 홍보
- 정부-언론 합동 저출산 극복 공익캠페인, TV·라디오 공익광고 연 주 기획·추진 등 홍보 강화

나)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 기회 확대
- 일반인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확대

다)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 작은 결혼식 우수사례 배포, 영화상영관 홍보 등 작은 결혼식 인식 확산
-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확대 등 작은 결혼 정보센터 활용도 제고
- 결혼예식업자의 불공정 행위 관행 철폐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

〈표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저출산대책

추진전략	세부전략	핵심과제
청년일자 리·주거대 책 강화	청년일자 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활성화(16~) * 임금피크제, 상위10% 임금동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40만개 일자리 기회 창출 ▶ 청년고용절벽 해소(16~) * 청년고용증대세제(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등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고용-교육연계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임대주택 대폭 확대(16~)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 등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으로 매년 1만쌍 추가 수혜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16~)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한도 현실화(수도권 1억→1억 2천, 비수도권 0.8억 → 0.9억으로 대출한도 상향조정),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0.2%p 금리 우대)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임산·출산 에 대한 국가 책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출산패키지(16~) * 초음파, 1인실 등 주요 비급여의 급여 전환(16), 본인부담금 해소(본인부담금을 현재 20~30%수준에서 5%로 완화)(18) ▶ 난임부부 100% 지원시스템 구축(17)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종합상담지원체계 구축, 난임휴가제 도입(3일 무급) 추진
	포용적 가족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차별금지법 제정, 인식개선 운동, 사회·제도적 차별개선 방안 연구 및 공론화 추진 ▶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패키지 도입(16) * 아동양육비 현실화(15년 월 15만원, 17년 월20만원, '19년 월25만원), 주거-양육-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책임교원제'도입을 통해 임신학생상담 의무화,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대상 확대(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준비 시 월10만원 지급→아동연령 제한 삭제 등 지원요건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맞춤형 안심 보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아동 수요 맞춤형 보육 개편(16)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16~) * ('15) 29% → ('20) 39% → ('25) 50% ▶ 초등1~2학년 돌봄서비스 질 제고·확충(16~) * 초등돌봄 : ('15) 24만명 → ('20) 26만명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 전명시행(16) * 진로체험교육 강화, 1인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18)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착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 '17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NCS 기반 채용 확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 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16) * 아빠의 달 인센티브 강화(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동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부·공공기관 평가시 남성육아휴직 실적 반영 ▶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 * 근로시간단축: ('14) 연간 2,124 → ('20) 1,800시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스마트 워크 활성화
	중소기업· 비정규직 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 * 육아휴직지원금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인상), 지원금 중심에서 고용복지+ 센터 중심으로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개편, ▶ 비정규직 육아휴직·재고용 지원 강화(17) *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을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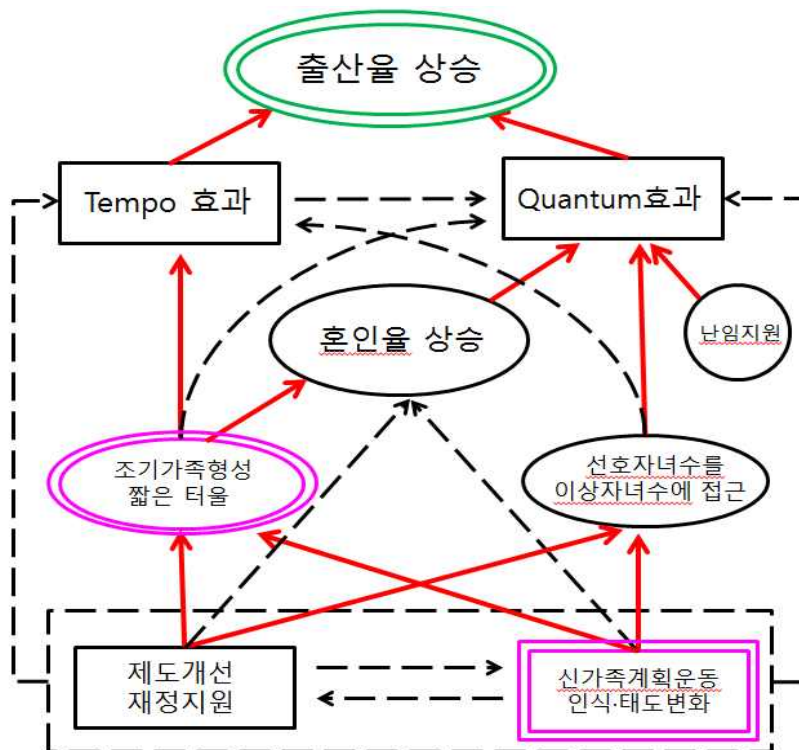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 제3차 대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가. 출산을 상승 메커니즘

- 1) Tempo 효과와 Quantum 효과가 출산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2) “조기 가족형성과 짧은 터울” 및 “선호자녀수 증가”는 출산 시기 (Tempo)를 앞당기고, 출생아수(Quantum)가 늘어남
- 3)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재정지원”을 필요조건이라면, “신가족계획운동, 인식·태도변화”를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두 가지 요인이 “조기 가족형성”과 “선호자녀수 증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출산율이 상승하게 됨.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나. 제3차 기본계획 성공을 위한 주요과제

1) 사업총괄 부서(또는 기관)와 연구기능의 강화

- 모든 정부기관(지자체, 교육기관 포함),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조직과 리더십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을 대통령 직속으로
-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과제 개발, 추진방법 개선, 효과측정 및 평가 등)결과에 따라 정책 및 재정투입으로 예산 효율을 극대화 -> 「인구정책연구원」(가칭) 신설 또는 현재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인구정책연구” 중심 기관으로 확대개편

2) 보육정책의 전면 개편 및 초등 부설유치원의 확대

- 학부모들의 숙원(?)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위하여 사설보육원에서 국공립보육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전면개편.
- 현재 5세 아동을 공사립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전면 수용하고, 장차 조기 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으로 연계
- 국공립보육원과 초등 부설 유치원의 확대에 양질의 시설, 교원자질, 교육과정 등을 제공

3) 일-가정 양립이나 인식개선을 위해 지도층이 선도해야

-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 감소요인이지만 출산율이 낮은(TFR<2.1) 경우 여성 취업이 안정적일 수록 대체출산수준에 접근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가 마련되었으나 실천은 요원함. 기관장이나 CEO의 인식변화가 필요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이나 부서장이 앞장서서 기업주를 만나고, 주민을 만나는 노력을 할 때 지역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4) 전 국민대상 인구정책 홍보와 교육 실시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방송, 문학, 인터넷,

거리매체 등)을 동원하여 국민 모두가 항상 접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필요함.

- 사회인구교육: 사회분위기 변화, 임신·출산대상의 변화유도. 산발적 교육에서 전반적인 집중교육으로. 예, 전 정부기관의 교육연수기관, 기업 등 사설연수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저출산·고령사회의 이해” 교과목 의무배정.
- 학교인구교육: 인구정책은 장기간의 변화를 전제로 하므로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와 인식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지금의 저출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10년 또는 20년 후의 결혼과 출산 주체는 현재의 청소년임. 반드시 교육기관이 핵심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미래사회를 예약해야 함.

5) 전문가 양성과 적극적인 활용

- 인구학, 인구정책, 인구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절대부족. 관련 기관이나 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예, 인구정책 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정책담당자 및 일반 전문가양성 목적)
-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의 체계화: 양성을 위한 연구, 교재개발,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총괄할 기관(또는 부서) 신설. 또는 기존 기관의 기능과 조직개편으로 위 기능을 수행.

선진국 사례(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와 시사점

김상호 원장(보건사회연구원)

1. 출산율 추이

- 인구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을 겪는지 1세기 이상이 된 서구 선진국에서 저출산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2.73, 1993년 1.65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4년에는 1.98명으로 나타남.
 - 스웨덴의 경우 1990년 2.14명에서 1999년에 1.52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 1.91명으로 나타남
 - * 스웨덴의 출산율은 경기와 연동하여 롤러코스터 형태로 변화(불황기 여성 실직 증가와 국가급여 감축 → 가계부담 증가 → 출산율 감소, 반면 호황기에 급여 증가 → 출산율 회복)
 -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63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2013년 1.83명으로 상승
 - 미국도 1960년에 3.5명 이상이였으나 급속히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 2013년에는 1.86명으로 나타남

2.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사례

가. 프랑스

(1) 기본방향

-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철학 하에 장기적인 인구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출산장려, 자녀양육비용 보조, 유자녀 가족 빈곤퇴치와 가족 간 빈부격차 완화, 직장과 가정 양립의 4가지 정책적 목표 하에, 출산장려(pro-natalist) 목표,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여성의 상대적 지위 향상 등의 서로 대립적인 지향점을 가진 4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
 - 출산율은 192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와 가족보호를 위하여 가족수당과 가족계수의 2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 초기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감소시키는 수평적 사회통합을 강조
 -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회복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에 대한 우선순위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면서 종래 수평적 사회통합에 수직적 사회통합에 대한 접근도 가미되기 시작
 -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중점
 -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여 여성 근로자들의 상대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1990년대 중반부터는 가족형성 지원, 가족구성원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 확보 등 일반적 가족지원으로 확대
 - 결혼율 저조, 동거 증가 등에 따른 출산기피로 가족구성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 전체 가족으로 지원 확대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으로 전환

-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공고하게 정비된 사회복지제도(가족정책),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 제도, 전통적 가족주의와 더불어 비전통적 가족제도의 제도권으로의 포용 등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

(2) 주요 정책

- (수당) 1930년대 가족수당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수당들이 도입 및 통합, 현재 소득 제한 없이 지원
 - 2004년부터 여러 출산장려제도를 통합하여 유아환영수당(PAJ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수와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PAJE는 출생수당, 기초수당,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
 - 이 외에 가족수당, 특정목적수당, 주택수당 등의 각종 수당 제도 운영
- (조세)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족을 과세단위로 조세 혜택 적용
 - 동일한 소득의 경우, 가족계수가 많을수록 계수 1당의 과세소득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감세 효과 발생
- (일-가정양립) 노동법상 임신부 보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성 제고(혼외출산율 53.7%, 2009년)

나. 스웨덴

(1) 기본방향

-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
 - 특히,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사회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질 높은 아동보육, 다양하고 선택 가능한 휴직제도(아버지휴가 포함), 휴직 시 높은 임금대체율 등이 포함
 - 즉 스웨덴은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및 양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단위의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

(2) 주요 정책

- (일-가정 양립) 스웨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실현
 -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보장하며(부모보험제도),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해 2년 반 이내에 추가 출산한 경우에 스피드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를 적용
 -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총 480일이며, 이중 390일동안 임금의 80%지원(나머지 90일은 최소 비율로 제공)
 -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하여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가사분담비율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함
 - 여러 OECD 국가들이 3세 이상 아동(유아)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치중한 것과 달리, 스웨덴에서는 출산 여성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도 확충하는 등 공적 보육서비스 정비에 투자

-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공공분야직장(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을 제공(스웨덴 여성고용의 50%)하여,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가족 친화적 제도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
- (보육) 스웨덴에서 공보육은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필수 요소로 맞벌이, 성 평등, 사회전체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동등한 기회 증진을 목표로 여기고 있음.
- 공보육은 이러한 것을 정책 목적으로 받아들이던 1970~1990년 동안 상당히 향상되었고, 현재에는 사실상 스웨덴의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을 받을 기회를 갖고 있음.
- (수당) 아동수당(보편적), 교육수당(16세 이상 고등교육 진학 시),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
-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 성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거의 없음
- 삼부법(Sambo, 사실혼이나 동거)을 통해 재산분여나 양육권 등을 규정하여 이혼 혹은 삼부 해소 후에도 남성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됨

다. 영국

(1) 기본 방향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영국 정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정에 두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 1997년 노동당 승리 이후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

- 종래 대량생산체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유연화가 수반되고, 그로 인해 실업이나 고용불안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새로운 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
- 또한 경제적 불안정 구조나 이혼율 상승으로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전통적으로 강하게 존재하였던 성별역할분업모델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계층으로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
- 그 결과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지
 - 구직 및 재취업 용이, 탄력근무, 파트타임 등 일-양육 병행이 용이
 - 공공부문 여성 대상 파트타임, 서비스직 대폭 확대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 공급 선도
- 다양한 가족, 이민에 대한 수용성(2010년 혼외출산율 46.9%)

(2) 주요 정책

- (수당/세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는 세액 공제가 발달되어 있음.
- (돌봄) ‘가족’중심의 비공식 양육(조부모, 친인척 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2011년 12세 미만인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조부모에게 의료보험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로 보육서비스 공급 및 가격의 적정성 유지, 질적 수준 제고, 공급자 다양화 제고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동거가족 자녀에 대하여 법률혼 가족의 자녀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
- (고용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공)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 시 20주

의 모성휴가를 남성이 대신 사용토록 함.

-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며, 유급육아휴직 39주, 유급모성휴가 39주 지원

라. 미국

- 미국의 출산조절정책은 인구 억제나 증가 목적이라기보다 주로 인종 간 분포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
 - 백인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백인인구가 줄어들면 흑인과 이민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인종자살'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음. 여기에 더해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출산을 억제한 측면도 있었음.
- 미국에서는 혼외출산율이 높는데 이에 따라 미혼모와 그 아동의 복지존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미혼모가 직업을 준비하고, 일하고, 결혼하도록 하여 복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함.
- 자녀양육가정지원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근로활동 유인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임.
 - 이 외에 자녀세액공제(CTC), 자녀보육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을 지원. 일가정양립정책으로 산전후휴가로서 출산 혹은 입양 여성에게 12주간 무급휴가를 보장하며, 육아휴직은 일반 휴가를 통해 사용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미흡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약한 편이나, 파트타임 노동 보급, 재취업 용이성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세제도 등을 통해 높은 출산율 실현
 - 자녀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제공
 - 또한 국민 대다수가 미국사회를 '자녀양육의 비용은 낮고 생활하

기 쉬운 사회'로 생각하고 있어 출산율에 유리하게 작용

- 정부정책보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보육인프라 확충
 - 국가의 직접적 정책은 미흡하나 저비용 민간보육 이용 활성화
- 양성평등이 주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이민수용성 존재(2007년 기준 혼외출산율 38.5%)

3.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이 실행하고 있는 제도(대책)들 대부분은 이미 한국에서 도입하여 실행 중
 - 다만, 수준이 낮거나(예로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 수준 - 우리나라는 40%, 최고한도액 1,000만원), 사각지대 존재(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등) 등 문제점 노정
-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거수당, 조부모 돌봄인센티브, 부모보험제도, 스피드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 등
 - 이들 제도 모두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하나 사회적 합의, 예산 확보 등이 필요
 -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거수당, 조부모 돌봄인센티브, 부모보험제도 등
 - 기술적인 문제(예로 짧은 출산간격으로 인한 건강 등 문제) 검토 필요
 - 스피드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 등

4. 시사점

-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의 저출산대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육아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일가정양립 구현)으로 구분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당제도의 발전 및 영유아기 건강 및 돌봄, 교육 등에 있어서 저비용 및 무료 (저소득층 등) 제공 체계 구축
 - 영아를 포함하여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내지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 양성평등에 기반한 일-가정양립제도 발전 및 가족친화적 기업 및 남성 문화 조성
- 현실적으로 이들 세 가지 영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경우 출산율 반등이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보건의료, 보육, 일가정양립 등에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여 실행해왔으나, 아직 그 수준이 낮으며 사각지대(특히 일가정양립제도)가 존재하고,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미성숙
 -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성(예로 육아지원과 일가정양립제도)이 미약한 점도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은 원인으로 작동